광주시 U대회 '인사 특수'

내년 조직위 발족 100명 필요…2015년엔 450명으로

광주시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덕택에 '인사 특수'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 특별법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2월께 하계유니버이아드 조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정무직' 사무총장과 2급 사무처장, 3급 본부장 3~5명 등 모두 10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 정원은 시청 정원과 별도로 광주시 공무원들의 대폭의 승진·전보 인사와 신규채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조직위는 인력을 연차적으로 늘려 2013년엔 300명, 2015년엔 최대 450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사풍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자리를 둘러싸고 사무총장은 외부인사가 임용되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승진 발령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시청 내부 인사가 사무총장직도 맡을 것이란 설이 무성하다.

시는 조직위 출범에 맞춰 통상 12월 또는 1월 초에 이뤄지는 광주시 정기인사 시기를 조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소수 인력이 조직위에 파견되겠지만, 대다수는 시청 내부 인사와 신규 인력으로 구성될 것 같다"며 "U대회 조직위 출범이 광주시 인사적체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북핵·한미 FTA' 집중 조율

내일 한미정상 회담…그랜드바겐 공감대 기대

한국군 아프간 파병·전작권 문제는 논의 안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세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기간 첫 회담을 한데 이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번째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북한 핵문제라는 데 이의가 없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감을 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랜드 바겐이란 6자 회담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방미 기간 미 외교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그랜드 바겐에 대한 중국과 일본 정상의 공감을 공식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랜드 바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인터뷰에서 '그랜드 바겐'이란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북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구상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지난번 그랜드 바겐에 대해 미국 측과 실무적 협의까지 한 만큼 두 정상이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지난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의회 비준 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 선언적 의미의 합의 이상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공영주차장 고무줄 요금

이 종 행

사회1부 기자

도대체 광주시 북구청 앞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얼마인가?

지난 13일 밤 7시30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공영주차장.

정해진 공간에 차를 주차하자 4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 달려왔다. 기자가 "주차요금이 얼마죠?"라고 묻자, 이 직원은 "밤 10시까지 (2시간30분동안) 5천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곳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규정을 알고 있던 터라 기자는 직원에게 "주차 요금을 멋대로 징수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주차 요금표대로 징수한 것"이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기자는 며칠 전에도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 땐 2시간30분 주차에 4천원을 냈었다.

기자는 같은 시간 동안 주차하고도 1천원의 주차요금을 더 내야 했다. 며칠 사이에 주차 요금이 오른 것일까. 내심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사흘 뒤 이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기관인 북구 교통과에 주차 요금을 확인해 봤다. 이 공영주차장은 북구로부터 2년간(지난해 2월~내년 2월 말) 운영권을 넘겨받은 개인업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3급지 기준 30분 이내, 기본 300원이며 15분 초과 때마다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장애인·고엽제 후유증환자·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은 1시간 이내 주차 요금이 면제되며, 800㎤ 미만의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주차 요금 300원 땐 180원)를 면제하게 돼있다.

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면 2시간30분 주차 요금은 1천500원이 된다. 규정 요금보다 주차료를 세 배 이상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이것도 모자라 각종 감면 혜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곳의 부당한 주차 요금 징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일보는 2년여전 '전남대 후문 공영주차장 고무줄 요금' 〈2007년 9월 3일자 9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부당 징수 행위는 2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이다. 개인업자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업자의 부당 징수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이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알아서 피하란 얘기인가. 북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업주의 부당 징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사이 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대 후문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부당 징수에 대한 민원이 구(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부당 징수 요금을 토해내라는 심상치 않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구의 '눈감은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하다.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주승용 민주 도당위원장 내달 사퇴하나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혁신과통합추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역 위원장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안을 마련,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시기가 촉박함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둬 12월 말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주승용 도당 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선·軍공항도 무안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17일 "광주공항 국내선과 군사공항을 패키지로 묶어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공항에서 무안공항까지는 20분 거리에 불과하다"며 "무안공항은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잇는 요충지인데다 안개일수도 낮아 전 세계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만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수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서전 '정찬용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재휴씨 민주당 입당원서

○…내년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재휴(59) 광양녹색미래연구소장이 17일 민주당 광양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김 소장은 이날 "33년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행정·경제에 대한 경험들을 고향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방자치의 희망을 담아내고자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아틀란티스호 우주로!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틀란티스 우주선이 굵은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솟아오르고 있다. 이 우주선에는 6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1일간의 우주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친자확인 소송' 이만의 장관 1심 패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발행된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25일 미국 시민권자인 진야모씨(56·여)의 외동딸 진은정씨(35)가 지난해 10월8일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은정씨)는 피고(이 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씨는 1971년 11월께 이 장관을 만나 서로 사귀었고, 진씨는 1974년 11월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장관은 1975년 6월에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씨는 한 달 뒤인 7월 22일 은정씨를 낳았다. 진씨는 그해 7월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으나 나중 취하했다.

재판부가 친자라고 인정한 판단 근거는 ▲이 장관과 진씨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은정씨를 출산하게 됐고 ▲진씨가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으며 ▲이 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은정씨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이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미국에 있던 진씨는 지난 11월6일 입국한 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했다.

이 장관은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1심 패소와 관련, "그 사람(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1심 판결에)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